

방송통신융합 현상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을 중심으로

김동민*

(한일장신대학교 신문방송영화학과 교수)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자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방송통신융합, 정치경제학, 이윤율, 경향적 하락

1. 문제의 제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있다. 방송통신법의 제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논의되는 까닭이다. 제각기 영역을 구축해온 정부 관련 부서 및 기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극복하여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수용자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 wanju@mm.hanil.ac.kr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학자들은 융합매체들이 연착륙하여 건강하게 착근할 수 있도록 이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들은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인상비평에 치우치고 있다. 제각기 방송자본이나 통신자본에 밀착된 가운데 대립구도에 편승하고 있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 연구자들도 과학적 이론과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한 반대 담론만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난개발이니 정책의 실패니 하는 등의 감성적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안이나 방향의 제시로 이어지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비판적 연구자들은 통신자본의 음모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자본에 심정적으로 기울어 능동적 담론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4월19일 ‘방송위원회 직무수행상 문제점’이라는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방송위원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의 부족으로 방송정책이 표류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공신력의 실추를 초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문건은 또 방송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아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쟁에 개입함으로써 디지털방송 보급을 지연시킨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관료적 독단에 대한 항수이자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이라고 맞섰다. 방송위원회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혼란을 초래한 결정을 빌미로 정통부가 공격을 한 것이었다.¹⁾

방송·통신의 융합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한둘이 아니다. 정통부는 정통부가 추진 중인 BcN사업에 방송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지상파방송 4사가 컨소시엄 참가를 유보하게 됐다며,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의 이권만 대변해 범국가적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²⁾ 방송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정통부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 관련 부서를

1) 재전송 문제는 방송법 제78조 4항 및 시행령 제61조 3항 “방송사업자 간에 자율계약을 맺어 재송신을 신청하면 승인한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흡수통합하려 하고, 정통부는 통신·방송분야가 산업적 측면에서 몸집이 불어나 기술을 포함한 통신·방송을 아우르기는 방송위원회로서는 벽찬 조직이라고 반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구조개편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위한 TFT를 구성 운영해왔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 지점에서 학계는 행정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나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초월한 가운데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이 새로운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 이론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은 자본 운동의 필연적인 소산으로써 끊임없이 융합매체들을 선보이는 등 방송통신융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부구조로서의 이념이나 문화, 철학, 제도 등은 하부구조의 변동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기존의 연구

정치경제학 연구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경제학 연구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종 상태라고 해야 할 정도로 연구자와 관련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한때 비판언론학계를 풍미했던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정통 정치경제학 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미디어 정치경제학마저 자취를 감추었으니 정치경제학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간 듯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 결코 특정 시기에만 설명력을 갖는 허술한 이론이 아닌 이상 언론 현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2) 서울신문, 2005년 4월 20일자, 4면

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언론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정치경제학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론이다.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함께 급속하게 퇴조하였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마르크스 이론의 실패로 등치되었다. 마르크스 이론에 일정 부분 기댄 비판이론은 속절없이 무너졌으며, 특히 미디어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은 고수하던 영역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가들이 그랬듯이. 그러나 사회주의의 실패가 곧 마르크스 이론의 실패는 아니다. 생산력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성사된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 생산력 제고를 위한 뒤늦은 몸부림, 경쟁 없는 발전의 모색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한계, 군비경쟁, 관료화 등 예고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던 셈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혜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류역사의 법칙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의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의 정치경제학 연구의 불을 다시 지피는 자세로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다. 몇가지 비슷한 경향만 확인한다.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해서는 대세추종형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비판적 연구라야 방송의 공익적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통신자본의 방송 매체 개발 및 진입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책의 부재를 질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 연구의 대부분은 융합현상의 파고에 휩쓸려 왜곡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김승수 교수는 매체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 연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매체산업과 한국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상호관계”의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승수, 2004, 238쪽). 김승수는 나아가서 자신이 그 동안 분석한 직업이 “소유-통제 분석에 초점을 둔 영국식 정치경제학을 이식한 것에 불과했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 연구를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김승수, 2004, 241쪽). 이러한 제안은 그 동안 필자가 누차 지적해온 바 있는 내용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승수의 구체적인 분석작업에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승수의 분석은 정치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대신에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전송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 그는 “국민투표를 한다거나 해서 광범위한 국민의 견해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승수, 2003, 194쪽). “방송의 디지털화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소비자의 재정 상태, 방송 시장의 수급 균형, 매체 자원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후 다양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김승수, 2003, 200쪽) 라는 주장도 했다.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를 일반 시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느덧 정부, 가전업체, 방송사의 논리에 의식이 세뇌된 것은 아닐까?”(김승수, 2003, 195쪽) 라는 질문이나 “인터넷은 강대국과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인터넷 혁명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김승수, 2000, 251쪽)는 추측도 다분히 과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패배주의적 수동적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인터넷 강국일뿐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평호 교수는 작금의 뉴 미디어 현상을 ‘매체 난개발’이라고 규정한다. 김평호는 방통융합 현상의 근본적 이유를 “통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유무선 음성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의 결과”(김평호, 2005, 174쪽)라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진단에 대한 구체적 검증작업은 뒤로 한 채 현상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뉴 미디어 도입정책을 난개발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외형은 커졌지만 기대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오히려

우려했던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작용’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압축성장’(condensed growth)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한 ‘압축적 정보화’(condensed informatization) 정책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김평호, 2005, 170쪽) 라는 주장이다.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을 떠나 정보화 자체를 부정하는 편에 가깝다. 뉴 미디어의 등장은 정부의 도입 정책에 앞서 자본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을 정책으로, 그리고 국회는 입법에 의해 뒷받침해줄 뿐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남표·김재영(이남표·김재영, 2005)의 논문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정치경제학 연구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다는 정치경제학에는 마르크스가 없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곧 정치경제학인 것처럼 오인되어 풍미하던 기조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며 미국의 저명한 미디어 정치경제학 연구자인 모스크가 정리한 세가지를 소개했다(이남표·김재영, 2005, 121쪽). 이중 두 번째 원리를 보자.

사회적 총체성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권력관계 및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똑같은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부수적 차원에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요인도 있다. 한때 정치경제학이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골몰한 것은 그것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만약 문화적 요인에서 권력관계가 파생된다고 가정한다면 경제보다 문화적 구조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토대로서의 경제적 관계를 통해 상부구조로서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체성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적 요소인 권력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상관없는 새로운 이론이다. 사회적 총체성이란 자본주의의 사회구성체를 말하는 것이지 권력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골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정치경제학은 토대로서의 경제적 물질적 관계를 통해 상부구조를 설명했다. 그것만도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술을 경제이론에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사회구성체의 구조와 발전을 오로지 생산 관계만을 통하여 설명하면서,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이들 생산관계에 조응하는 상부구조를 탐구하였다(Lenin, 141쪽).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와 그것의 상부구조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Lenin, 149쪽). 또한 마르크스는 법적 정치적 철학적 제도들에 대한 설명은 생활의 물질적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Lenin, 151쪽). 정치경제학이 단순히 경제분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의 체계와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상부구조, 즉 정치·법·이데올로기 및 여타 현상들과의 밀접한 상호연관 속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 왜냐하면 이러한 상부구조의 제요소 역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능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³⁾ “한마디로 정치경제학은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전제한 상태에서 미디어의 행태, 역할, 기능 등에 비판적 탐구를 수행하는 이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이남표·김재영, 2005, 121쪽)는 인식도 정통의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경제학은 어떤 전제도 없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수용자 상품론을 낳기도 한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수용자가 미디어 상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수용자 상품론의 창조적 재해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남표·김재영, 2005, 132쪽). 임영호(임영호, 2000)의 경우, 수용자 상품론을 통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며 수용자 상품론이 “아주 특이한 유통구조가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미디어산업의 특수성까지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태적인 현상 단면 묘사와 소유구조 중심의 결정론적 해석에서 탈피해 경제과정에 대한 동적인 해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한계가 곧 정치경제학의 한계는 아니다. 정치경제학

3) *Political Economy: Capitalism*, 정치경제학원론(서울: 녹두, 1986), 27쪽.

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것을 혼동한다. 소유구조 중심의 결정론적 해석은 영국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한계이며, 정치경제학은 『자본론』에서 경제과정에 대한 동적인 해석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자본론』 제1권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직접적 생산과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2권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다른 한 축인 유통과정을, 그리고 제3권은 전체로서 본 자본의 운동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형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Marx, Karl, 1989, 39쪽).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한계 극복을 고만고만한 아류 이론에서 찾을 이유는 없다. 『자본론』에 충실함으로써만이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토착적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언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요컨대 생산은 직접적으로 소비이고, 소비 또한 직접적으로 생산이다. 각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반대이다. 그러나 동시에 양자 사이에는 매개 운동이 일어난다. 생산은 소비를 매개하고, 소비의 재료를 창출하며, 생산이 없으면 소비에서는 그 대상이 결여된다. 그러나 소비는 생산물들에게 비로소 주체를 창출해줌으로써 생산을 매개하는데, 생산물들은 이 주체에게 생산물들이다. 생산물은 소비에서 비로소 마지막 마무리가 지어진다(Marx, Karl, 2000, 60쪽).

3.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⁴⁾

1)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

자본(C)은 불변자본(c)과 가변자본(v)으로 구성된다.⁵⁾ 임금과 노동일의 길

4) The Law of the Tendency to Fall in the Rate of Profit, Marx, Karl, *CAPITAL*, Volume III, Introduced by Ernest Mandel, Penguin Books, 317~375쪽.

5) “이와 같이 생산수단, 즉 원료, 보조자재, 노동수단으로 전환되는 자본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의 크기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자본의 불변부분 또는 간단히 불변자본이라고 한다.

이가 주어져 있다면 100이라는 가변자본은 가동되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표시한다. 100만 원이 노동자 100명의 1주일 임금이라고 하자. 이 100명의 노동자가 잉여노동만큼 필요노동을 수행한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총가치는 200만원이 된다. 잉여가치율(m/v)은 100%가 된다. 반면에 이윤율($p'=m/C$)은 다르게 나타난다. 잉여가치율이 100%라면,

$$c=50, v=100인 경우 p'=100/150=66\frac{2}{3}\%$$

$$c=100, v=100인 경우 p'=100/200=50\%$$

$$c=200, v=100인 경우 p'=100/300=33\frac{1}{3}\%$$

$$c=300, v=100인 경우 p'=100/400=25\%$$

$$c=400, v=100인 경우 p'=100/500=20\%가 된다(Marx, K., 1989, 257쪽).$$

노동일이 일정한 조건에서 잉여가치율은 변함이 없는 반면에 이윤율은 불변자본(따라서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같이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해, 따라서 가동되는 총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이 법칙을 최초로 규명한 마르크스는 “일반적 이윤율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경향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더욱 더 발전한다는 표현,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독특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Marx, K., 1989, 258~259쪽)고 하였다. 즉, 위 계산에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의 경향은 노동생산력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이윤율이란 투여

이와는 달리 노동력으로 전화되는 자본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 그것은 자기 자체의 등가물을 재생산하고 또 그 이상의 초과분인 잉여가치를 생산 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역시 변동하여 크게도, 작게도 될 수 있다. 자본의 이 부분은 불변의 크기로부터 부단히 가변의 크기로 전화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 부분 또는 간단히 가변자본이라고 한다. 동일한 자본 구성 부분들이 노동과정의 견지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들로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구별되나 가치중식 과정의 견지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된다.” Marx, Karl, 『자본론』 제1권(1), 백의, 1989, 251쪽.

된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율의 비율이며, 따라서 이윤율은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신기술의 등장이 불변자본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상대적 과잉인구 즉 실업의 증가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될 수록 이윤율은 하락한다.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는 말은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은 개별자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결국 한 나라의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점차 고도화되어 총자본의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동수, 2005, 497쪽). 즉,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에서 기인한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가변자본)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총자본 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함께 늘어나지만, 가변적 구성부분이 불변적 구성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윤의 총량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총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이 떨어질 뿐이다.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불변자본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가변자본은 약간 늘어났다고 했을 때,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의 증가만큼 늘어난 반면 이윤율은 떨어진다. 이윤의 절대적 크기는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와 같다. 따라서 이윤의 총량은 이윤율이 크게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늘어난다. 잉여가치량 즉 이윤의 절대량은 늘어나지만, 이윤율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했다.

$$I. 4c+2v+2m; C=6, p'=33\frac{1}{3}\%$$

$$II. 15c+3v+3m; C=18, p'=16\frac{2}{3}\%(\text{Marx, K., 1989, 264쪽})$$

자본주의적 축적과 그에 따른 자본의 집적은 그 자체가 생산력을 높이는

물질적 수단이다. 이 생산수단의 증가는 노동인구의 증가,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과잉인구를 초래한다. 노동자들의 추가노동에 의해 축적된 추가자본이 노동인구에 비해 일시적으로 넘쳐나게 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혼을 쉽게 하게 함으로써 노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자본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들(기계의 도입과 개발)을 적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상대적 과잉인구를 촉진시킨다. 이는 폭발적 인구 증가의 온상이기도 하다(Marx, K., 1989, 265쪽).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대량생산의 진행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목도한다. 그 이유는,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노동과 생산하는 동안에 새로 덧붙여진 노동을 합한 양이 상품에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자본구성이 높아지면 더욱 더 많은 양의 생산수단을 더욱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어진 노동량이 더 많은 상품량에 실현되며 따라서 개개 상품에는 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arx, K., 1989, 273쪽). 이때도 각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잉여가치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크게, 그러나 천천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상품 총량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늘어난다. “즉 개별적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이 떨어지고 그 가격이 떨어지며 사회의 총자본이나 개별적 자본가가 생산하는 상품들의 늘어난 총수에 해당하는 이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Marx, K., 1989, 278쪽)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물론 이윤율은 떨어진다.

2) 상쇄요인들(Counteracting Factors)

(1) 노동강도의 강화

가변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곧 이윤과 같다.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늘어나면 잉여가치율도 높다. 여기서 잉여가치량의 증대는 노동력의 양이 늘어난 결과이며, 잉여가치율의 제고는 노동의 착취정도가 늘어난 결과이다.

그러나 주어진 크기의 자본(예컨대 100)으로 말하면 잉여가치량은 평균적으로 줄어들지만 잉여가치율은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에 따라 규정되는 데 비해 잉여가치율은 가변자본 부분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불변자본이 일정하거나 증가한다고 해도 가변자본과 같은 비율로는 증가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오르므로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Marx, K., 1989, 283쪽). 즉, 잉여가치율은 올리는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이윤율의 하락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데 동원되는 방법이 노동일의 연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윤율의 하락이 일정 기간 동안 억제되고 완만해지며 약화되는 법칙으로 작용할 뿐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임금이 노동력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

임금이 노동력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 분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Marx, K., 1989, 285쪽).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의 가치하락이나 가치 이하로의 임금 인하가 반드시 실질임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의 향상은 생필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더 적은 가치가 보다 많은 사용가치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변자본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이윤율의 하락을 억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3) 불변자본 요소들의 값이 싸지는 것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불변자본의 양이 늘어나게 돼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치를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불변자본의 가치가 끊임없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정자본의 물량 즉 똑같은 양의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물량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개별적 경우에는 불변자본 요소들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그것들의 가치가 같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사정은 경우에 따라 이윤을 낳는 자본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윤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이윤율

의 하락을 억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Marx, K., 1989, 285쪽). 이는 불변 자본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역시 이윤율의 하락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상대적 과잉인구

상대적 과잉인구로 인한 자본에의 종속상태는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금은 평균 이하로 되고, 따라서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이 크게 높아진다. 그 결과 개별적 생산부문들의 이윤율이 균등화됨으로써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다소간 하게 된다(Marx, K., 1989, 286쪽).

(5) 대외 무역

대외무역에 의하여 불변자본의 요소들과 또 가변자본이 전환되는 생활필수품의 값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대외무역은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불변자본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이윤율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대외무역이나 식민지에 투하된 자본은 초과이윤을 실현하며, 보다 높은 이윤율을 실현한다(Marx, K., 1989, 286~288쪽).

(6) 주식자본의 증가

주식시장에 투여된 자본은 이윤(이자+온갖 종류의 이윤+지대)이 아닌 이자, 즉 배당금에만 관심이 있다. 주식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배당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확보된 잉여가치를 분할 받는 것으로 만족할 뿐 평균이윤율의 형성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주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달이 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김동수, 2005, 503쪽).

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계(Development of the Law's Internal Contradictions)

잉여가치=이윤에서 이윤은 산업이윤만이 아니다. 이자와 지대도 있는 것

이다. 다음 공식을 보자.

$$m/C = p/C = p_1 + z + r/C = p_1/C + z/C + r/C$$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데 따라 잉여가치의 총액(m)은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사회적 총자본(C)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m/C)도 C가 m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끊임없이 줄어든다. 따라서 $m/C = p/C$ 나 p_1/C , z/C , r/C 은 각각 그 자체로 보면 끊임없이 작아지는데 p_1 , z , r 은 늘어날 수 있다. $m=p$ 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이윤율 $m/C = p/C$ 는 하락하는 조건에서 $m=p$ 가 갈라지는 부분들인 p_1 , z , r 의 양적 비율은 총액 m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달라지면서도 m이나 m/C의 크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또 m/C이 하락하더라도 총자본에 대한 개별적 산업이윤율(p_1/C), 이자율(z/C), 지대의 비율(r/C)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셋의 합계가 m/C라는 조건은 변함없다(Marx, K., 1989, 294~295쪽). 가장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에 따른 축적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직접적 목적이며 규정적 동기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제1막인 직접적 생산과정에 해당하고, 곧 제2막이 시작된다. 이윤율의 하락으로 생산력의 발전이 촉발되어 잉여가치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난 후 소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생산물(상품)이 팔리지 않거나 일부만 팔린다면, 또는 생산가격 이하의 가격으로밖에 팔리지 않는다면, 자본가의 자본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될 수 있다. 직접적 착취(생산)의 조건들과 그 실현의 조건들이 같은 것이 아니다. 특히 후자는 서로 다른 생산부문의 균형성과 사회의 소비력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이 소비력은 적대적 분배관계에 기초한 소비력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 적대적 분배관계가 절대 다수 대중의 소비를 어느 정도 좁은 한계 안에서만 머물게 한다(Marx, K., 1989, 296쪽). 그리고 자본의 축적 욕망, 큰 규모로 자본을 늘리며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생산방법의 끊임없는 변혁, 이와 관련한 자본의 가치 감소, 전반적 경쟁과 현상 유지 내지는 몰락의 위험을 염두에 둔 생산의 개선 및 규모

확대의 필연성 등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이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내려 한다(Marx, K., 1989, 297쪽).

이윤율이 떨어지더라도 지출되는 자본이 커짐에 따라 이윤량은 늘어난다. 그 결과 생산조건들이 점차 대량의 자본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돼 자본의 집적이 초래된다. 대자본이 등장하면서 소자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윤율의 하락과 축적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축적에 따라 노동이 큰 규모로 집적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구성이 더 높아지면서 축적은 이윤율을 더 빨리 떨어뜨린다. 또 한편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의 집적이 촉진되고 소자본을 수탈함으로써 자본의 집중이 촉발된다. 그럼으로써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축적율도 하락하지만 축적은 양적으로 보면 증대된다. 또 이윤율의 하락은 새로운 자립적 자본의 형성을 완만하게 하며 그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이윤율의 하락은 과잉생산, 투기, 공황, 과잉인구 및 과잉자본을 촉진시키는 것이다(Marx, K., 1989, 293~294쪽).

요약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한 법칙은 개별 자본가의 의지로써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를 통해 새로운 생산수단의 도입을 강요한다. 그 결과 개별자본은 생산의 질적 변화를 맞게 되고, 새로운 조건의 일반적 도입에 의해 사회적 생산성이 향상된다. 즉, 개별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가의 의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김동수, 2005, 505쪽).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가는 자기 상품의 개별적 가치를 사회적 평균치 이하로 끌어내려 주어진 시장가격에서 약간의 초과이윤을 얻는 데 집착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이윤의 일반적 평균수준에 의존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투자, 새로운 보험을 미친 듯이 찾아내려고 하는 투기가 생긴다. 자본의 형성이 오직 이윤을 이윤량으로 매꾸어가는 소수의 대자본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생산은 중단될 것이다.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추진력이기 때문이다(Marx, K., 1989, 312쪽).

3. 방송통신융합의 배경

방송통신의 융합은 DMB와 IPTV(Internet Protocol TV)이 이르러 절정에 이르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IPTV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화학적 결합을 앞둔 마지막 소모전일 것이다.⁶⁾ 연구자들에게 IPTV가 방송이나 통신이나 하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단지 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규명한 후 그것의 사회적 파장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문제는 연구자들도 영역다툼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되어 정작 해야 할 작업에 정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조직이 자본의 이익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민복지를 고려하면서 자본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총자본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학계와 방송계의 정보통신부 비판과 통신자본과의 대결구도 조성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 있다. 중요한 것은, 통신자본이 왜 초고속통신망과 DMB에 이어 WiBro(휴대인터넷), BcN(광대역통합망)사업 및 IPTV 등 융합매체의 개발로써 방송사업에 진출하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초고속인터넷망보다 50배나 빠른 BcN 사업에 2조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가입자망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⁷⁾ KT 등 통신자본들은 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IPTV등 각종 콘텐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KT는 WiBro 사업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2006년 6월중 서울 및 수도권 10개 도시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며, 2008년에는 59개

6) 방송위원회는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 주문형 인터넷콘텐츠)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인터넷 영역임을 고수하고 있다.

7) 서울신문, 2005년 3월31일자, 4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KT는 WiBro를 정체된 유선통신시장의 새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무선 구축, 콘텐츠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⁸⁾ KT는 경쟁사에 비해 강점인 유무선 인프라와 인터넷망, 가입자망, 기간 전송망, 무선 랜, KTF의 이동통신망과 KTH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최대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하나로텔레콤은 BcN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는 BcN으로 HFC(광동축망) 기반의 VoIP(인터넷전화) 서비스, IP망을 근간으로 한 화상전화, 방송사와 연계한 고화질 VOD 서비스와 IPTV를 포함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 7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⁹⁾ 이동통신 업체들은 정체 상태의 매출을 증가세로 돌리기 위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무선인터넷을 띄우지 않고는 10조 매출 벽을 넘지 못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업계 진단도 나온다.¹⁰⁾ SK텔레콤이 2005년 5월부터 비동기 IMT-2000 이동통신(WCDMA)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서비스용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는 “2~3년 안에 주력사업이 비동기 IMT-2000 이동통신으로 바뀔 것”이라며 “올해에만 통신망에 6,000억 원을 투자하고, 20만 이상의 가입자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¹¹⁾ KTF도 올해 WCDMA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이 WCDMA망을 이용해 2006년에는 3.5세대 이동통신(HSDPA)¹²⁾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침이다.¹³⁾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06년 5월16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HSDPA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이날 서울지역 주요 대리점에 HSDPA폰 W200을 공급했

8) 서울신문, 2005년 4월22일자, 19면

9) 서울신문, 2005년 4월22일자, 19면

10) 한겨레신문, 2005년 4월21일자, 27면

11) 한겨레신문, 2005년 4월20일자, 27면

12)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1.8~10Mbps까지 가능한 무선 데이터통신 서비스다. WiBro는 1Mbps.

13) 삼성전자는 최근 2세대 3세대 이동통신망을 모두 사용하는 전천후 WCDMA폰을 개발,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2005년 E3면

다.¹⁴⁾ HSDPA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추진하는 WiBro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SK는 와이브로도 2006년 초 서울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HSPDA가 새로 통신망을 깔아야 하는 와이브로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¹⁵⁾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초고속인터넷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포기했다. SK텔레콤도 WiBro를 WCDMA를 보완하는 틈새 서비스로 규정해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광역시 중심으로 좁히기로 했다. KT만 남는 셈이 된다. 정부(정보통신부)는 이에 4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나섰다. 2세대(셀룰러, PCS)는 미국, 3세대(비동기 IMT-2000)는 유럽이 표준과 기술을 주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지만 부가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¹⁶⁾

그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경우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통신의 융합에 머물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와 금융까지 묶는 복합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SKT 김신배 사장은 지난 3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이동통신 관련회의에서 “컨버전스 시대에 성공할 수 있으려면 고객이 원하는 복합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화된 네트워크와 고기능 복합 단말기 등 3박지를 갖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⁷⁾ 문제는 통신자본이 기술 개발에 집착하는 배경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IPTV 등 융합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법에 대한 관련 부처 간 논란을 종식해 서비스 조기 도입과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엄격히 구분해 상업 방송과 뉴미디어(CATV·DMB·위성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 통신 산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또 통·방 구조

14) 중앙일보, 2006년 5월17일자, E1면. 3.5세대는 전송속도(초당 비트)가 3세대의 2M에서 5.76~14.4M로 향상되었으며, 화상통화도 고화질로 향상되었다.

15) 조선일보, 2005년 4월20일자, B3면

16) 한겨레신문, 2005년 5월16일자, 55면

17)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1일자, 21면

개편과 관련해 “각 분야의 규제대상·논리·수단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없는 개편은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 정치게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의 구조적 문제점을 놔둔 채 통신 분야를 이용해 방송정책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우 IT산업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⁸⁾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도 같은 맥락이다.

통신자본이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배경은 당연히 잉여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보다 많은 이윤의 추구에 있다. 통신자본이나 전자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휴대전화기나 컴퓨터의 신상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급속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확대재생산을 생명으로 하는 자본의 운동은 긴박해 지지 않을 수 없다. 기술 개발을 최대한 가동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새 상품의 개발과 콘텐츠시장에의 진출에 승부를 걸고 있다. TU의 위성DMB진출 및 지상파 재전송 요구, BcN(광대역 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WiBro(휴대인터넷, Wireless Broadband Internet),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DPA(초고속 패킷 접속,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IPTV(Internet Protocol TV), MediaFLO 등의 개발이 그 소산이다. KT와 SK텔레콤은 영상콘텐츠 사업에도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다시 이윤을 하락을 초래하는 순환을 반복하게 할 것이다.

다음 표는 중앙일보가 매출 상위 5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2004년 및 199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의 일부이다. 50대 상장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특징지워진 가운데 통신업종은 전기·전자업종과 더불어 고용이 증가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 상위 20개사’에 SK텔레콤(14위), LG텔레콤(16위), KTF(20위) 등 3사가 들었고, ‘매출 증가율 상위 20개사’에는 KTF(5위), SK텔레콤(10위), LG텔레콤(11위) 등 3사가 역시 순위에 들었다. 그러나 ‘순이익 증가율 20개사’에는 SK텔레콤만 1999년 3041억 원에서 2004년 14948억 원으로 391.5% 증가하여 11위에 들었다. 이는 그 동안 통신자본이

18) 전자신문, 2005년 4월 11일자

불변자본의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변자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사회적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일자리 증가

기업	1999년(명)	2004년(명)	증가인원(명)
SK텔레콤	3,250	4,249	999
LG텔레콤	1,042	1,981	939
KTF	1,962	2,441	479

<표 2> 매출 증가율

기업	1999년(억 원)	2004년(억 원)	증가율(%)
KTF	22,588	58,308	158.1
SK텔레콤	42,848	97,036	126.5
LG텔레콤	14,384	32,094	123.1

출처: 중앙일보 2005년 4월 5일자 4면

<표 3>을 보면 SK텔레콤이 이익 증가의 총량에 비해 증가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순이익의 총량은 압도적이지만 증가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최근 4년 간의 순이익 추이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SK텔레콤만 뚜렷한 상승세를 타다가 2004년에는 급격히 떨어졌고, 나머지 KTF와 LG텔레콤은 이미 2002~2003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가입자(3,700만 명)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⁹⁾

19)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시장은 주요 서비스 가입자 증가가 정체된 상태이고, 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매출도 하락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다. 통신업종의 매출증가율 하락도 2006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2005년 6월 29일자 B7면

<표 3> 순이익 증가율 상위 20개사

기업	1999년(억 원)	2004년(억 원)	증가율(%)
현대모비스	217	6,952	3,103.7
한진해운	367	6,457	1,659.4
신세계	222	3,359	1,413.1
SK네트웍스	356	4,606	1,193.8
동국제강	507	4,562	799.8
INI스틸	606	4,759	685.3
하이닉스반도체	2,243	16,925	654.6
두산중공업	264	1,664	530.3
삼성중공업	85	530	523.5
기아자동차	1,357	6,905	408.8
SK텔레콤	3,041	14,948	391.5
SK(주)	3,450	16,407	375.6
현대자동차	4,143	18,041	335.5
동부제강	303	1,217	301.7
삼성SDI	1,886	7,417	293.3
삼성전자	31,704	107,867	240.2
KT	3,833	12,555	227.6
S-Oil	2,879	9,411	226.9
제일모직	307	925	201.3
현대상선	1,429	4,278	199.4

출처: 중앙일보 2005년 4월 5일자 4면

<표 4> 이동통신 3사의 순이익 추이 (단위: 억 원)

기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SK텔레콤	11,403	15,113	19,427	14,948
KTF	4,358	5,322	4,074	2,839
LG텔레콤	1,544	725	787	226

SK텔레콤의 2004년 통화료 수입은 3조 5,280억 원으로 전년대비 4% 줄어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통신산업의 성장률이 1~2%에 불과해 성장세가 멈췄다”며 “기존 가입자를 바탕으로 이익은 많이 나겠지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²⁰⁾ SK텔레콤은 2005년 1·4분기에 매출 2조 4,119억 원, 영업이익 6,145억 원, 당기순이익 3,684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0.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1%와 18.6%씩 감소했다.²¹⁾ 이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DMB와 Wibro(휴대 인터넷), WCDMA(3세대 통신서비스) 등에 매달리는 것이다.²²⁾ 이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변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와이브로에는 1조원, WCDMA에는 3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불변적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이윤율의 하락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윤율 하락에 대비하여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위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들’ 중에서 ‘불변자본 요소들의 값이 싸지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불변자본이 감소하면 잉여가치율이 불변이더라도 이윤율이 오를 수 있다. PDP 생산의 기초가 되는 원판의 생산이 좋은 예다. 2004년 삼성전자는 한 장의 유리판에서 원판 6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6면취 공법을 달성했으며, 이를 조만간 생산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김동수, 2005, 501쪽). 실제로 PDP 패널(화면)을 만드는 삼성SDI는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3라인에서 6면취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6면취란 유리원판 한 장에서 PDP 패널 6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SDI의 생산기술은 과거 1라인(2면취), 2라인(3면취)으로 계속 발전해온 끝에 6면취까지 이른 것이다.²³⁾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불변자본 요소의 값을 내림으로써

20) 동아일보, 2005년 4월 6일자, B2면

21) 서울신문, 2005년 4월 29일자, 18면

22) 특히 위성DMB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던 2001년부터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DMB 그 거대한 탄생”, 한겨레21, 제554호, 2005.4.12, 20쪽

23) 중앙일보, 2005년 4월 18일자 E6면

PDP 값도 내리게 돼 초과이윤을 얻을 뿐 아니라 이윤율의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삼성SDI는 2005년 1분기 매출액이 1조 8,634억 원에 영업이익 156억 원, 순이익 54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PDP 매출액이 3,730억 원을 기록했다.²⁴⁾ 삼성전자는 또 일본 소니와 합작으로 세계 최초의 7세대 기판의 TFT-LCD 패널 생산을 개시했다. 7세대 LCD는 한 장의 유리기판에서 32인치 12장, 40인치 8장, 46인치 6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²⁵⁾ 이는 기존의 6세대보다 LCD TV용 패널을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다.

LG전자 이영하 부사장은 “지난해 철판 등 원자재가 인상, 원화 절상으로 20% 이상 가격 인상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내놓으며 가격을 10~15% 정도 올렸다”며 “올해도 이 같은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해외공장의 프리미엄화, 연구개발 강화 등으로 지난 해 5.1%였던 영어이익률을 2007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²⁶⁾ 불변자본 요소들에 대한 고민과 이윤율 제고에 대한 노력 등을 엿볼 수 있다. 통신자본 역시 불변자본 요소들의 값을 내리는 기술적 투자나 신상품 개발 등 이윤율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KT의 ‘메가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 문건을 근거로 하여 KT가 인터넷 종량제로 바뀌야 초고속인터넷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²⁷⁾ 지금의 정액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사업 전망도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건은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2003년 559만 명에서 2005년 660만 명으로 늘고, 2008년에는 716만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또 초고속인터넷 투자비는 갈수록 줄고 매출은 늘어나며, 영업이익은 2004년 223억 원 적자에서 2005년 224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2008년에는 9,616억 원으로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에는 그동안 쌓인 영업이익 적자를

24) 동아일보, 2005년 4월 21일자, B5면

25) 서울신문, 2005년 4월 20일자, 16면

26) 서울신문, 2005년 4월 18일자, 18면

27)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14일자 1면

모두 떨고도 1900억 원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분히 장밋빛 전망이 섞인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인터넷 종량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KT의 주장을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국한하여 볼 수도 없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드러나지 않은 불변자본의 투자와 연간 4~5천억 원에 이른다는 가입자 확보 비용 및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은 신통치 않았다. 해마다 갑절씩 증가하는 데이터 양에 비해 수입이 늘지 않아 통신망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KT의 주장²⁸⁾에서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윤율 하락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이 마르크스가 설명한 대로 이윤율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과잉생산과 투기, 공황, 과잉인구 및 과잉자본을 축진시키게 된다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윤의 일반적 평균수준에 의존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투자를 미친 듯이 찾아내려고 하는 투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표 5> KT 초고속인터넷 수익 전망(단위:억 원)

	매출	투자액	영업이익 누적치
2003년	1조 8,890	5,235	-7827
2004년	2조 810	3,701	-8049
2005년	2조 2,514	2,948	-5809
2006년	3조 3,804	2,072	-1660
2007년	2조 4,149	2,500	5,630
2008년	2조 5,327	2,400	1조 5,220

4. 결론

방송자본과 통신자본은 최근의 짧은 기간 동안 자본의 불변적 구성부분에

28) 한겨레신문, 2005년 4월14일자 4면

막대한 투자를 했다. 방송자본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비 교체와 케이블, 위성, DMB 등 새로운 매체영역에, 그리고 통신자본은 네트워크와 중계망 구축, 단말기 지원, 콘텐츠 개발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끝을 모르는듯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투자는 정책 차원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정책의 실패나 매체의 난개발이니 하는 비판들은 무의미하다. 방송 통신의 융합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매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 것만은 아니며 제어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법칙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설령 그것이 난개발로 비춰질 수 있다 해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이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는 기초 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난개발현상으로 나타나는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용자복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자본은 가입자 수와 사용료 수입 및 단말기 판매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통신 영역을 뛰어넘는 매체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흑백TV 수상기의 판매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컬러TV 개발을 준비한 일이나, 아날로그 컬러TV를 디지털 HDTV로의 전환을 준비한 일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통신수단에 불과하던 인터넷이나 전화가 방송이 결합된 융합매체로 변신하고, 케이블TV는 이에 맞서 통신서비스를 결합하고, 지상파방송도 멀티캐스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다. 이 현상을 한쪽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일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비판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이 현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한 정치경

제학의 적용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가입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자본의 집중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거대자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성장속도에 비례하여 성장의 둔화 현상도 빠르게 나타남으로써 이동사업자들은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윤율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보다 구체적인 통계로써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변화,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구체적인 통계로써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는 후속의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과학의 임무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통해 이론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이론도 지금의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치경제학’의 이름을 동원한 접근들도 정체를 상실하거나 변죽만 울리면서 빗나간 진단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방송통신융합이 분명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의 진행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이론의 대입은 타당성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이론 본래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학 연구에서 정치경제학이 올바르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도 보다 면밀하고 충실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융합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론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김승수 (2000). 『디지털 제국주의』.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03). 『디지털 방송의 정치경제학』.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
- _____ (2004). 매체산업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시론.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년 10월 22일.
- 김평호 (2005). 압축적 산업화와 압축적 정보화의 문제: 뉴미디어 도입정책 비판. 2005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5년 5월 7일.
- 이남표·김재영 (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 2005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5년 11월 4일.
- 임영호 (2000).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한계와 전망: 생산 개념의 비판과 수용자 상품론의 함의.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편), 『21세기 미디어 연구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 Marx, Karl (1980). *CAPITAL*, Vol. III, The Law of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Introduced by Ernest Mandel, Penguin Books.
- _____ (1989). 자본론 제III권(1), 서울: 백의.
- _____ (2000).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울: 백의.
- Work of Lenin Vol. XIV.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henomenon o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entering around the Law of the Tendential Fall in the Rate of Profit

Dong-Min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anil University

This paper try to explain the phenomenon o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y the law of the tendential fall in the rate of profit. With the progressive decline in the variable capital in relation to the constant capital in the sphere of the telecommunication, this tendency leads to a rising organic composition of the total capital, and the direct result of this is that the rate of surplus-value, with the level of exploitation of labour remaining the same or even rising, is expressed in a steadily falling general rate of profit.

The reason to apply this law is to inquire into the true state of the phenomenon o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howed like the disorderly development.

Key words: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Political economy, Rate of profit, Tendential fall